

01. ⑤ 02. ① 03. ④ 04. ② 05. ③ 06. ② 07. ④ 08. ④ 09. ⑤ 10. ①
11. ③ 12. ⑤ 13. ③ 14. ⑤ 15. ① 16. ② 17. ⑤ 18. ④ 19. ② 20. ③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중 좁은 정치를 넓게 이해하고, 옳은 좁게 이해하고 있다. ⑤ 좁은 의미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정치를 이해할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면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면 시민 단체나 이익 집단 내에서 의사를 형성하는 것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③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에 비해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이해할 경우 소수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2. 정당 제도의 이해

정답 해설 : 정당 제도 중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한 A는 양당제이다. 따라서 B는 다당제이다. ㄱ. 다당제에서는 의회에 진출한 정당의 수가 많으므로 양당제에서보다 다양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기가 용이하다. ㄴ. 양당제에서는 다당제에서보다 국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ㄷ. 양당제인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단독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다당제인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연립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 ㄹ. 양당제, 다당제 모두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 제도이다.

3.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 해설 : 법치주의의 유형 중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 행위의 형식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강조한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ㄱ.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 권력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 ㄷ. 법치주의의 유형에 따라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구분하여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의 경우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 평등 등과 같은 헌법 상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

4.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갑국은 대통령제, 을국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행정부의 의회 해산권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서 인정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다.
- ③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인 것은 대통령제이다.
- ④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다.
- ⑤ 대통령제에서는 의원 내각제에 비해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5.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가)는 현실주의적 관점, (나)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③ 자유주의적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국제 사회는 힘의 논리보다 이성과 제도의 영향력이 크다고 본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권력 관계보다 상호 협력 관계를 중시한다.
- ②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힘의 균형 상태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 ④ 자유주의적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 모두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이익 추구를 배타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 ⑤ 국제 사회에서 초국가적 행위체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6.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이해

정답 해설 :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중 A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B는 근대 민주 정치, C는 현대 민주 정치이다. ② 근대 민주 정치는 입헌주의에 근거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근대 시민 혁명을 통해 형성·발전된 것은 근대 민주 정치이다.
- ③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모두 의회와 같은 대의 기구를 통해 국가 정책이 결정된다.
- ④ 민주 정치는 모두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추구한다.
- ⑤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여자, 노예 등은 정치 참여가 배제 되었으므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다.

7. 선거 결과 분석

정답 해설 :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한 갑국과 을국의 최근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갑국의 선거 결과>

(단위 : 석)

구분	A당	B당	C당	D당
지역 대표 의석수	120	50	20	10
비례 대표 의석수	40	30	20	10
총의석수	160	80	40	20

<을국의 선거 결과>

(단위 : 석)

구분	가당	나당	다당	라당
지역 대표 의석수	105	50	30	15
비례 대표 의석수	15	40	30	15
총의석수	120	90	60	30

④ 갑국의 최근 선거 결과에 을국의 선거 제도를 적용하면 B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40석, C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40석이다. B당과 C당의 의석수가 같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갑국에서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한 명의 후보자만 공천하는데 지역구 의석수 200석 중에서 A당이 120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갑국의 지역구 선거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이다. 따라서 지역 대표수와 지역구 선거구 수는 200으로 같다.
- ② 을국의 경우 의회 내 과반수 정당이 없으므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라면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다.
- ③ 을국의 가당 비례 대표 의석수와 라당 비례 대표 의석수는 15석으로 같다.
- ⑤ 을국의 최근 선거 결과에 갑국의 선거 제도를 적용하면, 가당 145석, 나당 80석, 다당 50석, 라당 25석이다. 따라서 가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의석률이 낮아질 것이다.

8. 정치 참여 집단 이해

정답 해설 : 정치 참여 집단 중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이다. ④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활동하나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 ②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 ③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이다.
- ⑤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9.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정답 해설 : A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청구권이다. ㄷ.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에 해당한다. ㄹ. 헌법 재판소는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 양산 방지라는 입법 목적과 피해자의 사익 간에 적절한 비례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아닌 △△ 특례법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ㄴ. 을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권리 구제형 헌법 소

원 심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과 달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10.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A는 조약이다. ① 조약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국가를 초월한 국제법의 입법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우리나라에서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 ④ 조약은 체결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갖는다.
- 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은 국제 관습법에 해당한다.

11. 국민 투표 제도 이해

정답 해설 : 직접 민주제 요소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A는 국민 투표이고 B는 국민 소환이다. ③ 국민 소환 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선출한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 투표를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
- ②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가 요구된다.
- ④ 법률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직접 민주제 요소는 국민 발안이다.
- ⑤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

12. 우리나라 헌법 기관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 중 A는 국회, B는 대통령, C는 법원, D는 헌법 재판소이다. ⑤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은 헌법 소원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그러나 결산을 검사하는 권한은 감사원에 있다.
- ② 국무 회의의 의장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
- ③ 대통령은 법원의 구성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을 임명한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대통령은 사면, 감형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법원을 견제할 수 있다.

13.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정답 해설 : ㄴ. 을은 용돈으로 고가의 자전거를 구매하였다. 용돈의 처분 행위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을의 부모는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을은 거래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므로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갑은 부모의 동의 없이 고가의 자전거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의 부모는 자전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갑이 을에게 자전거의 시가를 속여 매도하였다면 사기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14. 특수 불법 행위 이해

정답 해설 : ㄷ. 갑이 정에게 건물의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인 A는 특수 불법 행위 중 하나인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을이 A에게 건물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모두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의 행위로 인해 정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정은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채무 불이행 책임은 계약 체결자인 갑이 지는 것이다. ㄴ.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인 병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해야 한다.

15.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해

정답 해설 : ㄱ. 병은 2019년 5월 7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므로 해당 일에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을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2019년 7월 9일에 을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이므로 임차권을 주장하여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을이 우선 변제권을 획득한 날짜는 2018년 4월 16일의 다음 날인 2018년 4월 17일이다. 따라서 을은 A보다 후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ㄴ. 경매 신청 주체와 상관없이 등기부 을구의 순서대로 채권액을 변제받는다. 따라서 B는 A보다 후순위로 채권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16. 이혼과 상속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병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므로 A와 을과의 친족 관계는 소멸된다. 따라서 A에 대한 을의 면접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ㄷ. 18세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률혼을 하면 성년 의제된다. 따라서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의 부모가 갖는

친권은 소멸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ㄴ. 갑과 병은 재판상 이혼이 진행중인 것이지 이혼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 사망 시 갑은 병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권자이다. ㄷ. 을이 사망하면 친양자로 입양된 A는 법정 상속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B만 을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권자이다.

17. 범죄 성립 요건 이해

정답 해설 : 범죄의 성립 요건 중 A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이다.

⑤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정당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현행범 체포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② 치료 감호 처분은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선고를 받은 심신 상실자 등에게 내릴 수 있다.

③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절도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④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된다.

18.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④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의 주체는 수사권자인 경찰관, 검사 등이고, 재판 단계에서의 진술 거부권 고지 의무의 주체는 판사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영장은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다.

② 구속 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구속된 이후에는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 피고인 모두 선임이 가능하다.

⑤ 형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루어진다.

19. 소년 사건 처리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② 갑은 15세이므로 형벌 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을은 10세 미만이므로 형벌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받지 않는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병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머리 위로 떨어지는 간판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행위인 긴급 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9세인 을뿐만 아니라 15세인 갑에게도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없다.

③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함께 내릴 수 없다.

④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

칙이다.

⑤ 폭력을 행사하여 노트북을 되찾은 병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자구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 노동자의 권리 구제 절차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을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을은 부당 해고에 대해 노동 위원회에의 구제 신청과는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근로 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한다.
- ④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과 달리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 ⑤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